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개정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 대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6
----------	----

제안년월일 : 2002. 12. 16.

발의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주 문

-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이후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미 군측은 공무집행 중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이양하지 않아 피 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
- 미국 대통령과 주한미군 측은 각종 범죄 및 사건처리를 위한 형사 재판권 이양과 미군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 행정협정 전면 개정과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충청북도 의회에서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세계 평화와 국가안보분야에 있어 미군 주둔은 공감하나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명백한 미군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되도록 하고,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의 사건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도록 하는 충청북도의회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를 언론에 공표하고, 주한미국대사,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촉구하고자 함.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개정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 대책 촉구 결의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1953년도 전시상황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해 원대한 꿈과 삶의 나래를 펴지 못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학생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주한미군의 범죄는 총 867건이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6.4%인 55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협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처참하게 죽어간 꽃다운 “여중생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진심 어린 직접 공개 사과”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1953년 전시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부간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 할 것을 촉구한다.
1. 그 동안 국내에서, 미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하여 진상규명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에 의해 사망한 두 여중생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 보상은 물론 미국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2002. 12. 16.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